

# 명징하게 직조해낸 비무장지대 실록(實錄)\*

류기현\*\*

[서평] 한모니까(2023),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돌베개, 540쪽

## 1. 비무장지대라는 역설적 공간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는 명칭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대단히 역설적인 공간이다. 1953년 7월 유엔군과 조·중측은 3년간의 격렬한 전투를 마무리하며 향후 충돌의 방지를 위해 군인과 무기를 배치할 수 없는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의 경계선으로 설정했다.<sup>1</sup> 그러나 현재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은 한반도에서 가장 조밀하게 무장된 지역 중 하나로, 언제라도,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이라도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장소이다. 2017년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북한이 핵이 아니라 비무장지대 주변에 배치된 자주포·방사포만으로도 몇 시간 안에 수도권의

\* 서평의 제목은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2019)에 대해 남긴 한 줄평(“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의 일부 표현을 빌려온 것임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1 본고는 정전협정의 일방인 북한·중국을 지칭할 때 ‘조·중측’ 또는 ‘북·중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북한과 중국은 ‘조중연합군사령부’를 구성했고, 정전 이후에도 두 나라는 공동으로 군사정전위원회의 일방을 구성했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 등 당대 자료들도 정전 관리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을 지칭할 때는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측(KPA/CPV)’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민간인 3만 명 이상을 사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보도했다.<sup>2</sup> 비무장지대보다는 ‘중무장지대’가 이곳의 실체에 더 어울리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한모니카의 『DMZ의 역사』는 비무장지대의 설치라는 아이디어의 형성, 정전 직후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구획 과정, 그리고 ‘중무장지대’로의 역설적 변모에 이르기까지 비무장지대가 겪어 온 역사적 변천을 종합적으로 추적한 선구적 연구다. 비무장지대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든 알고 있는 공간이자 세계적으로도 한반도의 분단을 상징하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지만, 비무장지대에 관한 ‘역사’ 연구는 의외로 드물다. 저자가 책의 서두에서 정리했듯이 1953년~2017년 기간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 지역에 관해 생산된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정부·민간 기관 보고서 등이 900건이 넘는다(25). 그런데 1,000건에 육박하는 선행 연구의 상당수는 비무장지대의 생태 환경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이거나, 비무장지대 공간 활용 및 운용에 관한 정책적 견지의 연구들이며, 비무장지대의 형성·무장화 과정을 국제적·한반도적 맥락을 고려해 역사적 시야에서 추적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는 역사 연구자, 특히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에게 비무장지대는 분단 질서의 일부로서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익숙하여 ‘낯설게’ 볼 생각을 쉽게 하기 어려운 공간이고, 또한 ‘낯설게’ 보고자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사료를 어떤 문체의 식과 이론으로 파고들어야 할지 길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사적 지형 속에서 이 방대한 540쪽의 책이 이론 학문적 성취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출간 직후부터 『DMZ의 역사』에 대한 학계와 일반 독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출간된 2023년 11월부터 이 서평을 작성하는 2024년 여름까지 책에 관한 저작비평회·북토크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학술지와 언론을 통

2 「NYT “한반도 전쟁시 첫날 3~6만 명 사망 가능성”」, KBS 뉴스, 2017.7.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511629>(접속일: 2024.8.29.).

해 몇 편의 서평도 발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이다.<sup>3</sup> 이러한 관심과 호평은 책의 학문적 성취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책이 정전 70주년이라는, 사회적으로 시의적절한 시점에 출간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서평자는 책에 대한 학계와 언론의 호평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한반도 냉전사 및 남북관계사 연구자의 입장에서 다소 아쉽거나 의문스러웠던 부분들 몇 가지를 제시해보고, 비무장지대 및 한반도 정전체제 연구가 향후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할지를 나름대로 전망해보고자 한다.

## 2.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변화·제도·행위자

저자가 『DMZ의 역사』에서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1950년~1970년대 초반 비무장지대가 겪은 물리적 변화의 양상이다.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이 시간적 흐름을 따라 겪은 물리적 변화 과정은 이 책의 가장 기본적·핵심적인 분석 소재라 할 수 있는데, 저자는 그 과정을 ‘비무장지대의 탄생과 구획(1장) → 전면적인 무장화(2장) → 체제선전장화(3장)’라는 흐름으로 분석한다. 비무장지대가 한국전쟁의 산물임을 감안하면 분석의 시작점이 1950년인 것은 바로 납득할 수 있지만, 분석의 하한을 1970년대 초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문이 있을 수 있

3 2024년 1월 20일 역사문제연구소가 저자 및 3인의 토론자(김지형, 이현진, 최철영)를 초청하여 저작비평회를 개최했다. 저작비평회의 내용은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역사문제연구』 53(2024) 참조. 2024년 7월 13일에는 한국냉전학회가 개최한 「냉전 읽기와 평화 찾기」 북토크에서 저자의 발표와 청중들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서평으로는 김도민(2024),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라는 ‘공간’ 연구의 새로운 과업과 어려움」, 『역사비평』 146; 정한범(2024), 「모순과 역설의 시간을 넘어선 상상의 공간」, 『금주의 서평』 680(국회도서관)이 있고, 언론 지면을 통한 소개로는 채인택, 「독일·중동에도 있던 비무장지대, 70년 지속은 이곳뿐」, 『중앙일보』 2023.1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419#home>(접속일: 2024.8.29.)이 있다.

다. 저자는 1970년대 초반을 평화지대화 논의를 비롯해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대안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분출한 시기이며, 비무장지대에서 “남북간 체제 경쟁과 선전의 틀”이 만들어진 시기로 규정한다(32). 즉 1970년대 초반이 현재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구조 및 이를 둘러싼 담론 지형이 기본적으로 완비된 시점이며, 따라서 1950년~1970년대 초반을 비무장지대사(史)에서 하나의 ‘era’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변화를 추동한 제도적 요인들의 형성과 변화다.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설치의 근거인 정전협정, 그리고 유엔군과 조·중측이 정전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체결한 정전협정 추가합의들, 유엔군과 조·중측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정전 관리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양측이 비무장지대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와 기구들을 고안해 내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이 양측의 산발적 충돌·한반도 내외의 정치적·외교적 변화 속에서 형해화되면서 비무장지대가 당초의 정체성을 잃고 무장화·체제선전장화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셋째, ‘첫째’와 ‘둘째’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식·정책·역학관계다. 즉 정전협정의 이행 주체들이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변화 과정 및 관련 제도의 형성·운용에 어떻게 관여했고, 비무장지대의 관리·유지 문제를 두고 이들 행위자들의 협력과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책이 제시하는 핵심 행위자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조·중측, 그리고 남한 정부다. 특히 저자는 “행위자들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주체는 유엔군사령부”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비무장지대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인식·정책을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한다(23-24).

저자는 위의 세 가지 요소들이 어우러져 비무장지대와 한반도 정전체제가 하나의 역사적 산물로서 만들어지는(building) 과정을 1~3장에 걸쳐서 설명한다.

먼저 「제1장 한국전쟁,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탄생」은 한국전쟁 기간 비

무장지대 설치안이 합의되고, 그 합의에 따라 정전 이후 비무장지대가 실제 한반도에 물리적으로 구획되는 과정을 다룬다. 한반도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는 1950년 11월 영국으로부터 처음 나왔다. 중국군의 한국전 개입이 본격화되자 영국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 완충지대의 성격을 갖는 비무장지대 설치를 제안했다. 저자는 군사 분쟁 종단의 방법으로 완충지대·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었을지라도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에게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부터 영토 분쟁을 중재하는 익숙한 방법이었음을 지적한다. 즉 비무장지대는 제국주의의 유산으로, 열강들의 전후 처리 방식 중 하나였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초 비무장지대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은 중국군의 남진이 가속화되자 태도를 바꾸었고, 이후 북한·중국도 비무장지대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으며, 1951년 7월 정전회담이 시작될 때에는 양측 모두 비무장지대 설치를 정전의 당연한 전제로 수용하게 되었다.

정전회담에서 첨예한 논의 끝에 양측은 접촉선을 기준으로 한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 합의는 시작부터 균열의 조짐을 보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시 양군의 접촉선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정경찰(civil police) 신분으로 무장 전투 부대를 비무장지대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정전협정에 명문화되거나(정전협정 9항), 정전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공동감시소조(군사정전위원회 산하)의 규모와 역할이 축소되는 등, 정전협정의 비무장지대 관련 조항들은 이 지역의 무장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제도적 균열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정전 이후, 균열의 조짐을 안은 채 비무장지대가 한반도의 중앙에 물리적으로 구획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 양측은 지리나 철조망 등 전쟁 기간 설치된 위험물들을 제거하는 비무장화 작업을 수행했고, 1,292개의 표지판으로 군사분계선을 땅 위에 표시했다. 정전 직후 표면적으로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무장되지 않은 완충 지역으로서의 외양은 일단 갖추었지만,

양측은 공동감시소조의 규모를 다시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상대를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제2장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와 냉전 경관」은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다. 2장은 비무장지대가 본격적으로 중무장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분석함과 동시에, 인간에 의한 정주(定住)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무장지대가 다른 곳과 구분되는 독특한 생태 환경을 갖게 되어 학술적 관심을 끌게 되는 맥락을 분석한다.

1960년대 비무장지대에는 땅굴(지하갱도), 철책, 초소가 대규모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정전협정 13항(ㄷ)목 무효화 선언 및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1960년대 초부터 비무장지대 부근을 포함한 국내 전 지역에 지하갱도 건설을 시작했다.<sup>4</sup> 흔히 남침용으로 알려진 북한의 땅굴이 실은 원자전을 대비한 방어용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또한 흥미롭게도 저자는 북한의 지하갱도 건설 기술이 베트남전쟁 시기 북베트남에 전수되었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난 구찌(Cu Chi)터널처럼, 북베트남 및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일명 ‘베트콩’)이 미국과 싸우면서 저항의 근거지로 활용한 지하갱도들이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하갱도를 봤다면, 유엔사와 남한은 비무장지대 내부에 GP(경계 초소)를 적극적으로 건설했다. 유엔사와 남한은

4 정전협정 13항(ㄷ)목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외부로부터의 병력 및 신무기 증강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1)대 일(1)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처리정형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여 시찰한다.”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전역에 GP를 구축하고 여기에 중화기·자동화기 등을 다량 배치했다.

베트남전쟁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를 양적·질적으로 촉진했다. 북한은 미국의 베트남 ‘침공’, 남한의 대규모 베트남 파병, 한-미-일 관계의 정상화를 자국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무력 도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에 맞섰다.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제2차 당대표사회가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을 기점으로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질적으로 달라졌고, 남한의 보복 조치도 훨씬 강경해졌다. 1967~1968년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양측의 충돌은 정전 이후 최고조에 달했고, 급기야 1967년 4월 오울렛 초소 사건 이후로는 공동감시소조의 기능이 마비되며 정전 감시 기구로서 군정위의 역할에 큰 제약이 생겼다. 미국은 남한의 베트남 파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상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1966~1968년 미국과 한국은 각종 첨단 장비를 갖춘 대형 철책 설치를 비롯한 대침투체계의 구축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처럼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군사 충돌의 현장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인의 정주 및 경제적 목적의 개발이 금지되며 독특한 생태 환경을 갖게 되었고, 저자는 이를 ‘군사 생태’(military ecology)의 형성으로 명명한다. 비무장지대의 독특한 생태 환경은 한국과 미국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966~1968년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연구소가 미 공군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한국 생물학자들과 공동으로 비무장지대 인근 생물상 조사 연구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 인근의 조류 및 설치류에 대한 연구를 비롯, ‘자연의 보고’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1966~1968년 한국과 미국의 대침투체계 구축 과정과 병행된 초목통제 프로그램으로 비무장지대 전역에 고엽제가 살포되기도 했다.

「제3장 1970년대 비무장지대의 화해와 체제 경쟁」은 1960년대를 거치며 고도로 무장화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

는 구상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무장지대를 체제 선전의 장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과정을 대성동과 기정동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구상의 등장을 1970년대 데탕트의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미-중 데탕트와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으로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강도를 낮추고자 했고, 한반도 정전체제와 관련해서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한국인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등을 구상하고 이를 남북한에 제안했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국은 서로에 대한 근본적 적대감을 결국 넘어서지 못했고, 데탕트와 남북대화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의 근본적인 물리적 변화는 없었다. 저자는 1970년대의 평화지대화 구상들이 당시 현실에서는 실패했으나, 이것이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방안들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고 주장한다.

데탕트-남북대화라는 절호의 기회에도 평화지대화에 실패한 비무장지대는 역설적으로 체제 선전장으로 고착화되었다.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남한의 대성동과 북한의 기정동이 남북한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냉전의 ‘쇼윈도’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남한 정부는 기정동에 비해 대성동의 생활 수준이 낙후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1971~1972년 대성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발 및 새마을사업을 진행했다. 1970년대 초반을 거치며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군사적 전초 기지일 뿐만 아니라, 체제의 우월성을 최전방에서 과시하는 임무까지도 부여받게 된 것이다.

### 3. 방대한 사료 활용과 입체적 서사

책의 전반적인 구성에서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방대한 사료의 활용이다. 저자는 대통령·장관·장성 등 국가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오간 거시적

논의부터, 비무장지대의 현장을 조사한 실무진의 논의와 보고까지 실로 다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저자가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이 흔히 활용하는 미국 국무부 문서나 한국의 외교사료관·국가기록원 자료는 물론, 유럽 각국의 외교 문서들을 폭넓게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제1장에서 비무장지대의 초기 구상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 문서를, 1960년대 초·중반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장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는 동독·헝가리 등 북한 주재 동구권 국가들의 외교 문서들을 폭넓게 활용했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군사정전위원회 자료의 적극적인 발굴과 폭넓은 활용이다. 군정위가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남·북·미의 거의 유일한 공식 소통 기구였고, 1990년대 초까지 정전 관리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군정위 자료의 검토는 정전체제의 역사적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저자 스스로도 이 책이 “군정위 자료를 전면적으로 활용한 첫 연구서”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지만(36), 이 책은 군사정전위원회 내부에서는 최고위급 회의인 본회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양측의 대령급 장교로 구성되는 비서장회의 회의록, 그리고 양측의 중·하급 장교들로 구성된 공동감시소조의 보고서까지 검토했다. 군정위 본회의 회의록의 경우는 일부 연구자들이 선별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비서장회의나 공동감시소조 같은 실무진 수준의 자료들은 본격적, 전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군정위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방대한 자료 섭렵은 선행 연구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한 비무장지대의 다양한 ‘디테일’들—정전 직후 비무장지대의 위험물 제거 과정, 표식물 설치, 민정경찰의 투입 과정과 운용의 실상 등—을 살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군정위 회의록과 보고서가 분량도 상당하지만 미 국무부·국방부 및 각 군사령부 문서군(Record Group)에 혼란스럽게 흩어져 전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 책의 자료 활용 양상 자체가 후속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나침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적 형성 과정을 남북관계사, 냉전사, 한미관계사라는 낱줄과 씨줄을 활용해 입체적 서사로 그려낸 점이다. 이 책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연구 지형 속에 위치한다. 남북한 경계선의 물리적 형성 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사 연구이지만, 동시에 냉전사의 중요한 단면을 드러낸 연구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제2장에서 1960년대 비무장지대 무장화와 대침투체계의 구축을 베트남전쟁과 결부시킨 부분이 그러하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북위 17도선에 구축한 방어 체계를 같은 시기 한반도 비무장지대 무장화에 적용하는 양상이나, 남한의 안정적 베트남 파병을 위해 다양한 반간첩 장비와 방어 시설을 비무장지대에 설치하는 양상은 미국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냉전의 연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이런 분석을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지역적(local) 차원의 사례 검토를 넘어, 지구적(global) 차원의 냉전 연구에서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저자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유엔사가 군사적 권한과 정치적 권한의 경계를 애매하게 넘나들며 정전체제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한미관계의 맥락을 보여주기도 한다.

#### 4. 행위자 분석에 대한 아쉬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이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변화, 관련 제도,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행위자들 세 가지이다. 이 중 앞의 두 가지에 비해 세 번째 사항, 즉 유엔사, 조·중측, 남한 정부라는 비무장지대·정전체제의 세 행위자들에 대한 검토·분석에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다.

먼저 유엔사에 대한 분석을 살펴본다. 저자는 세 행위자들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유엔사이며, 유엔사의 인식·정책이 비무장지대와 정전체

제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본문의 서술에서는 유엔사의 세부적인 조직 구조나 인적 기반, 사령부 운영 양상 등 유엔사가 어떤 제도적·인적 기반을 활용해 비무장지대 및 정전체제 관리에 개입했는지 발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유엔사는 산하에 정전사무국(Armistice Affairs Division)을 두고 판문점 방문객 통제를 비롯해 비무장지대 관련 업무를 맡겼는데, 이러한 유엔사의 정전 관련 산하 조직들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 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sup>5</sup> 물론 군사정전위원회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 책을 통해 정전체제 및 비무장지대 관리와 관련한 유엔사의 전체적인 조직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또한 유엔사의 존속 문제가 비무장지대 관리 및 정전체제 유지와 어떻게 결부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3장에서 저자는 미국이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남북한 충돌 증가로 “유엔사의 본질적 위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남한에 정전협정 준수를 강조했다고 서술했으나(276-277),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의 충돌이 왜, 어떤 방식으로 유엔사의 존속 근거를 흔들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은 없다. 왜 유엔에서 유엔사 존속이 쟁점이 되었고, 이것이 정전체제 유지 문제와 어떻게 결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대응 양상이 무엇이었는지 등 당대의 외교사적 맥락을 보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유엔사의 상대방 행위자인 조·중측에 대한 분석도 아쉬운 부분이다. 비무장지대와 정전체제는 유엔사의 일방적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중측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비무

5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는 유엔사 정전사무 특별보좌관(The Special Assistant, Armistice Affairs)으로서 일반인의 판문점 방문의 전체적인 감독·조정 책임을 졌다. 군정위 비서처장은 유엔사 정전사무국장(Chief, Armistice Affairs Division)을 겸임하면서 수석대표의 감독하에 판문점 방문에 대해 행정적 통제(administrative control)를 수행할 책임이 있었다. 류기현(2022), 「1950~60년대 판문점 개방과 남북한의 체제 선전」, 『역사와 현실』 126, p. 75.

장지대 및 정전체제에 대한 조·중측의 전반적인 인식·정책·관리 양상 또한 조금 더 규명될 필요가 있으나, 책의 2장을 지나 후반부로 갈수록 행위자로서 조·중측의 존재는 흐려지는 인상을 받았다. 이 책에서 조·중측의 비무장지대 관련 입장과 행위를 전부 다 다룰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행위자로서 그들의 존재와 위상을 조금 더 부각하였다더라면 더욱 입체적인 서사가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 책이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였음에도 자료적 논증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아보고자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북베트남의 지하갱도 건설과 북한을 연관시킨 부분이다. 베트남이 북으로 갱도 기술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1960년대 무장화 과정에서 체득한 기술을 북베트남에 수출한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 자체는 참신하고 흥미롭다. 그러나 저자가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북한이 북베트남에 토굴 작업을 위한 기술자(공병대)를 파견한 사실, 북한 갱도와 북베트남 갱도의 형태적 유사성 등 몇 가지 ‘정황’들이며, 이 정황 증거들로 북한이 기술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북베트남에 갱도 건설 기술을 지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베트남전쟁의 대표적 갱도인 구찌터널은 이미 1946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이미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베트남인들이 갱도를 유격전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기술 전수’를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sup>6</sup>

베트남의 북위 17도선 철책과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철책 건설을 연결한 부분도 비슷하다. 미국이 베트남에서의 철책 건설 및 운용 경험을 한반도에서도 활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고, 미국을 매개로 동시대 베트남과 한반도의 비무장지대가 연결되는 맥락은 분명 상당히 흥미롭다. 그러나 국무장관 러스크가 베트남 비무장지대 건설에 한국군 투입을 읍

6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구찌(Cù Chi)터널」, 베트남 픽토리얼, <https://vietnam.vnnet.vn/korean/tin-tuc/세계유산으로-등재-될-구찌cu-chi터널-258542.html> (접속일: 2024.8.29.) 참조.

선으로 고려한 사실을 가지고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인이 베트남 장벽 구축에 동원”되었다는 서술은(284)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도 저자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정전회담 과정을 다룬 147~149쪽에서 조·중측은 공동감시소조의 임무가 한반도 전역에 적용되지 않기를 원했던 반면 유엔군은 소조의 임무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려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설명이 없다. 또한 정전회담 과정에서는 공동감시소조의 활동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려 한 유엔군이 결국 소조의 활동을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로 국한하는 데 동의한 이유, 더 나아가 1954년 1월 유엔군이 소조의 축소를 제안한 이유 등, 정전회담 전후 공동감시소조에 대한 유엔군의 정책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듯하다.

또한 제3장에서 다룬 1970년대 초 대성동 개발은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 맥락에서 전개된 것인데, 최전선 접경지대인 대성동의 새마을운동과 여타 지역의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성동 개발이 당대 한국의 농촌 개발에서 어떤 역사적 위치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국내 정치의 변화가 비무장지대 무장화와 일정한 관련이 없는지도 궁금하다. 1966~1968년 기간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력 도발이 급증한 것은 물론 저자가 주장한 대로 베트남전쟁, 경제국방병진노선의 확립 등을 배경으로 들 수 있겠지만, 같은 시기 진행된 북한의 갑산과 숙청 및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는 무관한 것일까? 1967년 5월 조선로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가속화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후계구도의 정립 등 북한 권력 구도의 변화가 비무장지대 무력 충돌과 일정한 연관을 지니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 5. 남북 접경 지역에 대한 종합적 서사의 탄생을 바라며

『DMZ의 역사』가 비무장지대 및 한반도 정전체제에 대한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주춧돌을 놓았음은 의심할 바 없다. 이 책은 비무장지대와 정전체제를 정태적인 것이 아닌, 남북한과 동아시아, 지구적 냉전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로서 바라보고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저작비평회, 그리고 김도민의 서평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했지만, 남북관계사나 분단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역사학계에서 관련 연구자들도 이전보다 많이 배출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DMZ의 역사』의 출간은 더욱 의미가 있다. 비무장지대나 한반도 정전체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자들은 이 책이 제시한 화두들로부터 자신의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한국전쟁 ‘수복지구’의 체제 전환 과정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이제 비무장지대에 대한 굵직한 연구서를 내놓았다.<sup>7</sup> 여기에 전쟁 이전에는 남한 영토였다가 전쟁 이후 북한으로 편입된 ‘신해방지구’에 대한 연구만 추가된다면, 남북한 접경 공간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인 서사가 완성될 듯하다. 저자의 후속 연구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참고문헌

- 김도민(2024),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라는 ‘공간’ 연구의 새로움과 어려움」, 『역사비평』 146.
- 류기현(2022), 「1950~60년대 판문점 개방과 남북한의 체제 선전」, 『역사와 현실』 126.
- 역사문제연구 편집위 편(2024),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역사문제연구』 53.
- 정한범(2024), 「모순과 역설의 시간을 넘어선 상상의 공간」, 『금주의 서평』 680(국회도

7 한모니까(2017),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서관).

채인택(2023), 「독일·중동에도 있던 비무장지대, 70년 지속은 이곳뿐」, 『중앙일보』 2023.1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419#home> (접속일: 2024.8.29.)

한모니까(2017),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NYT “한반도 전쟁시 첫날 3~6만 명 사망 가능성”」, KBS 뉴스, 2017.7.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511629> (접속일: 2024.8.29.)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구찌(Cù Chi)터널」, 베트남 픽토리얼, <https://vietnam.vnnet.vn/korean/tin-tuc/세계유산으로-등재-될-구찌cu-chi터널-258542.html> (접속일: 2024.8.29.)

